

종합

고유기능 존중 폐지 폭 최소화

■ 광주시 산하기관 구조조정 배경

경제·문화 등 핵심사업 강화 서둘러 손질 나머지 조직들도 예산절감·운영혁신 요구

민선 5기 강연태 시장이 공기업이나 공단, 출자·출연기관, 기타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방침을 천명한 배경에는 이들 기관들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그에 따른 광주시의 막대한 지원, 기능 및 역할 미흡 등이 있었다. 특히 광주시로부터 출연금만이 아니라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 민선 3·4기에 이르러 그 수가 급증했으며, 조직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민선 4기 막바지에 설립된 공연예술재단과 전락산업진흥원은 설립된 지 6개월도 안 돼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강 시장은 이들 기관들이 민선 5기 광주시의 경제 및 문화 관련 핵심사업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서둘러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 방침을 추진해 2개월 만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기관들도 조직 축소 및 예산 절감, 운영 혁신 등 혹독한 시련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공기업조직혁신위원회는 “22명의 인원에서 30% 이상에 해당하는 7명을 축소해야 하는 디자인센터의 경우 문화산업과 연계성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성과물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운영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기업인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각각 1팀(11명), 2팀(11명), 1팀(6명), 1팀(2명)을 줄여야 하고, 빛고을노인복지재단(5명), 수완에너지(4명), 광주시체육회(3명) 등도 인원 감축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나머지 기관들도 1~2명의 인원을 축소해야 하며, 다만 광주비엔날레만은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이 강조돼 시민참여축제팀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라는 개념에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광주시로부터 300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도시철도는 인원 조정과는 별도로 당장 내년도 경상예산에서 13억5000만원을 절감해야 하며, 도시공사와 환경시설공단도 각각 8억5700만원, 4억3200만원을 줄여야 한다.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역시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등 거의 모든 기관이 수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여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외부 및 내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은

■ 광주시 공기업 구조조정안

(단위:명, 백만원)

기관명	조직효율화 (상위직급 축소)	정원 감축	예산절감 (정상경비 등)	정원조정효과 (인건비·운영·여비)	비고
계	-1위·1위장, -2위·2위장, -1단장, -4국, -1실, -4부, -10팀, -1계	-85	4,383	5,795	합계액 (10,178)
(주)광역정보센터	-	-1	-	41	2012 민영화
(주)한국CES	-	-	42	41	2016이후 민영화 검토
(재)문화예술진흥위	-1위·1위장, -1국	-8	74	329	문화재단에 통합
(재)공연예술재단	-1실, -1국	-6	207	247	
(재)과학기술교류센터	-1위·1위장	-1	25	46	테크노파크에 통합
(재)전락산업진흥원	-1위·1위장, -1국, -4부	-10	227	411	
삼우추수단	-1단장, -1국, -2팀	-11	-	2,420	법인해산
도시공사	-1팀	-11	857	495	
도시철도공사	-2팀	-11	1,350	475	
환경시설공단	-1팀	-6	432	256	
김대중컨벤션센터	-1팀	-2	161	89	
(주)수완에너지	-	-	-	164	
(재)광주비엔날레	-	1	39	-	시민참여 축제팀 신설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	181	41	
(재)디자인센터	-1팀	-7	140	288	
(재)광주테크노파크	-	-	92	-	
(재)신용보증재단	-	-	130	-	
(재)중소기업지원센터	-	-	64	-	
(재)빛고을 노인복지재단	-	-5	4	206	
(재)남도학숙	-	-1	4	41	
(재)광주영어방송	-	-1	28	41	
(재)광주발전연구원	-	-	201	-	
(재)·18 기념재단	-	-	-	-	법인의 특수성 고려 현행유지
시체육회	-1팀, -1계	-3	30	123	
시생활체육회	-1팀	-1	27	41	
시장애인체육회	-	-	10	-	
교통문화연수원	-	-	33	-	
교통약자이동지원	-	-	25	-	

문은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며 “또 이들 기관들의 연계성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

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설

문예기금 지방 확대 해도 너무 한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63.3%가 서울에 배정됐다고 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문화 향유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새삼스럽게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에 배정한 문예기금 내용을 보면 비례감을 느낀다. 총 730억원의 문예기금 가운데 461억9000만원(63.3%)을 서울이 독식했다. 경기도와 인천을 합하면 7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광주는 전체 기금의 1.8%인 13억원, 전남은 1.7%인 1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방은 지원 ‘홍내’만 내고 있는 꼴이다. 문예기금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이 서울 사람이거나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질병이 되다시피한 문예기금의 서울 독식에 대해 이의 제기와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문화예술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지난해 ‘지방 60%, 중앙 40%’ 비율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눈 하나 깜짝 않고 어겼다. 지방을 깔보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는 지방 문화·예술인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문화예술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129개 지방예총으로 구성된 전국지역예총협의회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역예총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해서 서울 사람이거나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국회 ‘SSM 규제법안’ 언제까지 미룰 건가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이 만든 대형마트나 SSM이 시장을 잠식하여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를 완전히 문 닫게 하더니 이제는 편의점과 함께 SSM 가맹점까지 만들어 골목상권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속수무책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이 진출할 때마다 영세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반려 등으로 견제하고 있으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광주 북구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가 이를 전 거리에 나서 광주시와 법원을 향해 ‘생존’을 호소했겠는가. 대책위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건축허가 문제로 북구

청이 1심에 패한 뒤 2심에 항소한 상황인데도 5법정이 삼각동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삼삼테스코가 제3자를 이용해 우회 입점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의 대책 마련과 함께 광주지법의 현행판 판결을 요청했다.

사실 영세상인 보호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까지 마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을 내세워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 다툼을 조정하는 법안이 자유무역 규정과 배치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법안 정부가 외치는 ‘서민경제 살리기’의 진정성을 의심 받지 않으려면 유통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어윤대(오른쪽) KB금융지주 회장이 27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 박홍석 회장과 광주는행 인수와 관련해 환담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光銀 인수 금융권서 협력해주세요”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에

광주는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상공회의소 박홍석 회장이 금융권 만형인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에게 “우군이 되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상의는 27일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광주상의를 방문해 박홍석 회장과 광주는행 인수와 관련해 환담을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68년 광주지역 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된 광주는행이 항토은행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협력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광주는행이 항토은행으로 돌아오려면 지역금융 산업이 발전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과 부가가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해 금융부문 발전이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 회장에

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어 회장은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광주는행 인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만약 항토은행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 성공적인 지방은행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규모가 큰 KB금융이 어려움을 겪는 호남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어 회장은 “구상 중인 새로운 기법을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오는 10월 광주는행 매각 공고가 발표되기 전인 9월에 광주는행 인수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대정부 건의, 설명회, 지역인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반감 속 밀어붙이기엔...

■ 여야 총리 인준 처리 전격 연기 배경과 전망

野 ‘부적격자’ 저지 못할때 정국주도 상실 우려

여야가 27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9월 1일로 연기한 것은 당장 총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기일뿐 의견 절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총리 인준까지는 여야 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근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접촉을 갖고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막판협상을 벌였으나, 총리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접점찾기’에 실패, 본회의의 처리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민 비상대책위 대표도 회동을 갖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이 안될 경우 다른 안건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시기를 늦춘 것은 인사청문특위에서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 내에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리의 잦은 말바꾸기와 자질, 여론의 역풍 등을 거론하며 ‘총리 사퇴 불가피론’을 잇따라 제기한 게 큰 변수가 됐다.

게다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닷새 정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한나라당이 의원 연찬회를 갖기로 해 또다시 본회의를 여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9월 초로 잡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본회의 연기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당은 국민적 반감 뿐 아니라 당내의 비호감도 상당한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였을 경우 나타날 역풍을 의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말로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실제적으로 힘에 밀려 임명동의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총리 인준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상황은 잠시 유예되고 총리 인준을 위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현격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핵심부는 여전히 집권 후반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총리 교체는 불가하다’면서 반드시 임명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총리 인준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총리 사퇴론’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여야 간은 물론, 여당 내부의 분란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9월 1일까지 총리 인준안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방북 카터 귀국길

역류 곰즈씨와 함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역류돼 온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27일 북한을 출발해 귀국 길에 올랐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곰즈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카터 센터도 성명을 통해 카터 전대통령 일행의 귀국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곰즈를 사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곰즈의 석방을 위해 방북한 카터 전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공방에서 출발 직전 5분간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신화통신은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공방에서 꽃을 들고 환송을 나온 북한 소녀에게 키스를 하고 곰즈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6일 새벽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에 나서 카터 전대통령과 회동했다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DTI규제 일부 완화 포함

내일 부동산 대책 나온다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DTI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6000만~7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장 보선

후보등록 잇따라

10·27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등록자들이 늘면서 내주부터 보궐선거전까지 본격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7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중식(62) 전 광주 서구청장이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6·2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선거에 나섰던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송갑석 전 전대협 의장도 오는 30일 예비후보 등록한 뒤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주부터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과 공식 출마기자회견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입해다 써도 이보단 나을듯 싶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부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서부 2200-571 사외부 2200-616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